

자사고 등 폐지 검토...영재·과학고는?

최상위 학교 '영재·과학고' 폐지 논의 빠져 진보교육계 "폐지 추진으로 고교 서열화 해소"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전환을 검토하는 가운데 영재학교와 과학고도 전환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 서 있는 이들 학교를 그대로 남겨두면 진정한 서열화 해소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설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들 학교를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7월 '상산고 사태' 때까지만 해도 단계적 전환 입장을 고수했지만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의 입시특혜 의혹으로 입시 공정성 요구가 커지자 '일괄전환 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영재학교·과학고 폐지에는 선을 긋는 모습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영재고·과학고 폐지는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외고·자사고 일괄폐지를 주장해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재학교와) 과학고도 (일반고 전환) 논의에 포함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보 교육단체를 중심으로 영재학교와 과학고도 일반고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우수학생 풀림 등 고교 서열화의 정점에서 있는 영재학교와 과학고를 그대로 둔다면 정부가 추진하는 고교 서열화해 소원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재학교와 과학고 또한 폐지하는 것이 맞다"면서 "일반고에 진학한 뒤 필요한 경우 위탁교육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학교 졸업생이 곧바로 영재학교·과학고에 진학하는 지금 방식과 달리 일반고 학생 가운데 과학영재 혹은 과학특기자를 선정해 과학교육 위탁기관으로 전환한 형태의 영재학교·과학고에서 가르치는 뜻이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고교 서열 체계 정점에 위치한 과학고와 영재고를 일괄 폐지해 특권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9학년도 전국 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을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이나 경기 고양 등 수도권 상위 10개 시·구 중학교 출신이 입학생 2명 중 1명(49.5%)으로 사교육 특구 풀림 현상이 나타났다.

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학교알리미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체 일반고 학생 중 0.4%가 서울대에 합격한 반면 영재학교에서는

35.6%가 서울대에 합격해 89배 차이가 났다. 8.9%였던 과학고도 일반고와 비교해 22배 차이가 났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영재학교에 떨어지면 과학고, 과학고에 떨어지면 자사고에 지원하는 등 이미 영재학교와 과학고는 고교 서열의 최정점에 서있다"며 "이들 학교의 폐지도 함께 논의해야 진정한 고교 서열화 해소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1



‘실전처럼’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 20일 대구 달서구 두류수영장 다이빙풀에서 열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 2019년 제5회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에서 응시자들이 레스큐튜브를 이용해 익수자를 구조하는 장비구조 시험을 치르고 있다.

‘수은 중독’ 남영전구 광주공장 근로자 6명 배상받는다

광주지법 화해 권고안 수용

2015년 남영전구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집단 수은 중독 사태 피해 근로자 6명이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8일 민주시민을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민사부(부장판사 김성훈)는 최근 피해 근로자 6명이 남영전구 광주공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양측에 화해를 권고했다.

피해 근로자들과 회사측 모두 화해 권고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권고안은 확정되며 이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다.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기한 마지막 날인 17일까지 남영전구 측이나 피해 근로자들의 이의제기가 없었다"고 밝혔다.

법원이 권고한 배상 규모는 원고 측이 청구한 액수의 3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다.

피해 근로자 6명은 2015년 남영전구 광주공장 형광등 제조시설 철거 작업을 위해 투입됐다가 수은에 중독됐다.

남영전구의 하도급업체에 소속된 일용직이었던 이들은 작업 후 극심한 통증과 불면증, 불안장애, 뇌 기능 저하 등 후유증을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전문 의료 기관의 신체감정을 통해 근로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와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매우 높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회사 대표와 책임자들은 철거 현장에 수은이 남아 있는데도 설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안전조치도 하지 않은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유죄를 판결받았다.



‘휴·폐업 유흥업소’ 화재안전 특별조사

소방청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이 있는 대형 유흥주점이 단속을 피해 일시적으로 휴·폐업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10월 말까지 화재 안전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으로서 지난 4월에 실시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하지 못한 휴·폐업대상 36개소다.

지난 4월 전국 179개소 대형유흥업소를 특별조사한 결과 31개소 양호, 휴폐업 등 36개소, 불량 112개소가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조사는 광주광역시 서구 클럽 붕괴사고에서 문제가 됐던 불법 개조, 증축, 용도변경 등 건축

분야의 위법사항부터 비상구 폐쇄·잠금,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고장방치 등 안전 전반에 대해 진행했다.

아울러 주간에 문을 닫은 대상은 야간시간대 불시방문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

또 다중이용업소가 밀집된 건물에 있는 대상의 경우 건축물 전체에 대한 화재위험성 진단 등 안전 컨설팅도 진행한다.

이유근 소방청 화재예방과장은 "불법증축, 비상구폐쇄 등 고질적 안전무시 행태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향후에도 편법적으로 특별조사를 피하는 일이 없도록 휴폐업 대상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슈 판결

‘두살배기 아이 인질’ 강도행각 벌인 3인조 징역 5~4년 선고

두살배기 아이를 인질로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강도행각을 벌인 3명이 각각 징역형을 판결 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갑섭)는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0)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공범 한모씨(27)와 김모씨(35)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명이 연대해 피해자에게 강취금 1875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조씨 등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만 특수강도 범행을 모의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했다"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집에 금품이 없어 대출 등을 실행하게 한 다음 16개월에 불과한 자녀를 볼모로 삼기도 했다"며 "이런 점을 모두 살펴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조씨 등이 범행 전후에 수사망을 피해 택시를 갈아탔고, 수사기관에 체포될 경우 다른 공범에게 체포 사실을 알릴 방법까지 계획한 점 등도 고려됐다"고 말했다.

조씨 등은 지난 7월 4일 오후 1시쯤 광주 북구 모 아파트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16개월 남아를 인질로 A씨(45·여)에게 현금 1500만원과 귀금속 등 1875만원 상당의 금품을 뺏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했으며, 범행 하루 전부터 범행장소를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 등 2명은 A씨의 아이를 흉기로 위협하면서 인질로 삼고 있다가 A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김씨의 연락에 아이를 놔두고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봉우 기자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력은요... 자태치로구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거운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태치로구, 자태치로구 주민센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 일반 건강검진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구강 검진
- 암 검진
-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므로,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